

자 료

농업과학 2004 심포지엄 참관기

- 농학계 대학은 농업을 버려야 되는가? -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 김 명 호 교수

지난 6월 11일 서울농업무역센터(aT Center)에서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한국농업과학협회, 대산농촌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후원한 농업과학 2004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심포지엄은 “농학계 대학은 농업을 버려야 되는가?” 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 하에 전국농학계대학장 협의회 회장인 서울대학교 농생대 이무하학장의 개회사와 대산농촌문화재단 류태영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네 가지의 주제발표와 박기영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특별강연,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농업 및 농학계 대학이 처한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볼 때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어 심포지엄 발표내용을 정리해 소개하고자 하며, 본 투고문은 심포지엄 발표원고의 발췌문임을 밝힌다.

심포지엄에서 토론된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매년 개최되는 본 심포지엄과 이를 적극 후원해 주는 대산농촌문화재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대산농촌문화재단은 지난해 타계한 교보생명의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에 의해 1991년 설립되었다. 첨단농업기술진흥, 농업구조개선, 복지농촌건설, 인류복지증진을 창립이념으로 삼아 지금까지 연구지원사업, 농촌문화창달사업, 장학사업, 농민교육사업, 대산농촌문화상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또, 1992년부터는 농학계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어 온 전국농학계대학교수 심포지엄을 적극 지원하여 왔다. 2001년까지 계속된 전국농학계대학교수 심포지엄은 그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2002년부터는 농학계 대학 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계 학회들이 함께 하는 한국농업과학심포지엄으로 통합되어 열리고 있다.

제 1 주제 : 농학계 대학 통폐합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발표자 :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부 / 박 권 우 교수

1970년대 이후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농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계속 축소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종사자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들어서면서 국민소득의 증대와 타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농수산 분야는 3D 업종의 하나로 인식되어 이 분야 종사 기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농과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이 양적, 질적으로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학과, 전공의 통폐합과 명칭 변경이 대다수의 농학계 대학에서 이뤄졌다. 과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었으며 추후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학과 통폐합 4년째인 고려대학교의 경우를 case study 형식을 빌려 살펴보았다.

1. 농학계 대학 학과 통폐합의 사례와 교수, 학생들의 의견(고려대학교의 경우)

1951년 설립된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은 1991년 자연자원대학으로의 명칭변경을 거쳐 2000년 대학본부의 요구에 따라 명칭변경, 학과 통폐합 및 교수들의 재배치를 포함한 변혁을 통해 5개 학부의 생명환경대학으로 다시 탄생했다(표 1 참조). 이 때, 학생정원은 교수 1인당 약 8명을 기준으로 재조정되었다.

명칭변경과 학과 통폐합 후의 커트라인은 크게 상승하여 전기전자를 제외한 공과대학 여타 학부들과 이과대학의 커트라인들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고, 교수들이 체감하는 학생들의 질과 전공에의 자긍심도 만족할 정도로 변했다고 공감하고 있다.

표 1 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의 통폐합 사례

통폐합 전의 학과명	통폐합 후의 학부명 *
식량자원학과 (4명)	생명유전공학부 (식량 1, 산림 1, 응용동물 2, 농화학 4)
산림자원학과 (6명)	
응용동물학과 (6명)	생명산업과학부 (식량 2, 원예 4, 응용동물 3, 농생물 2)
원예학과 (5명)	
농화학 (6명)	환경생태공학부 (농화학 2, 농생물 3, 산림 5, 식량 1, 원예 1)
농생물학과 (5명)	
식품과학 (5명)	식품과학부 (식공 3, 축산 1)
자원경제학과 (7명)	식품자원경제학부 (자원경제 7)

* 괄호 안은 통폐합 전의 소속학과 출신별 교수 숫자

최근 3년간의 학부별 1차 지원율은 식품과학부(모집정원 30명)가 137%, 생명유전공학부(모집정원 50명)가 123%, 환경생태공학부(모집정원 77명)가 86%, 생명산업과학부(모집정원 80명)가 8%를 기록하였다. 식품과학부의 높은 지원율은 학부의 명칭이 명확하여 졸업 후 취업방향 역시 뚜렷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생명산업과학부의 경우는 다른 학부들에 비해 전통적인 의미의 농학, 축산, 원예, 농생물 과목이 가장 적절하게 남아 있어 과거 농과대학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학부제 실시 후 처음 배출된 졸업생들과 학과로 입학하여 복학한 후 졸업한 학생들의 2004년 순수 취업율은 각각 20.4%와 40.7%로, 이러한 차이는 전공특성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생명산업과학부나 환경생태공학부가 전공의 표기가 다소 애매해서 졸업 후의 진로가 문제되지 않을지 생각된다.

학과 통폐합에 대한 교수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과반 이상 교수들은 통폐합의 가장 큰 동기가 학생수 감소와 커트라인 저하에 따른 대학본부 측의 강력한 의지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본 대학이 사립대학이라는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학과 통폐합 후의 만족도 조사 결과 30, 40대 교수들은 "만족"이 약간 많았으나 50, 60대 교수들은 많은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젊은 교수들일수록 순수 농학보다는 기초학문에 많은 지식이 있어 포괄적인 학문적 접근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

력이 있고 남아있는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50, 60대 교수님들의 경우는 수십년간 쌓아온 농학에 대한 크나큰 열정 때문이라도 통폐합에 만족할 수가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통폐합에 만족한다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질 향상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통폐합에 불만이라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취업·진로문제 및 교수와 학생 간의 소속감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지적하였다. 학생 모집 및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63%의 교수들은 입학 때부터의 학부별 모집을 선호하였으며, 32%의 교수들은 현행 1+3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나타냈다. 끝으로 농과계열 대학의 통폐합에 있어서 가장 발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50%의 교수들이 학부 4년간은 생명과학과 환경분야에 대한 전반적 기초지식을 폭 넓게 배우고 농학은 대학원에서 배우는 방안의 마련이라고 답하였다.

학과 통폐합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62%에 달하는 학생들이 잘못됐다는 답을 하여 교수들보다도 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전공이 애매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취업 및 유학, 대학원 진학에 문제가 될 것을 가장 큰 불만 사유로 지적하였다. 이의 해결책으로 78%의 학생들은 학부 내에 전공을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라도 전공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 교과과정의 변화를 지지하여, 앞에서 언급한 교수들의 의견인 학부과정에서의 전반적 기초지식 습득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의 학생 모집 및 선발 방법인 1+3 제도를 바꾼다면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는 질문에 54%의 학생들은 생명환경과학대학을 아예 한개 군으로 묶고 거기서 학점을 이수한 결과에 따라 전공이나 부전공을 인정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또, 학부의 정원에 구애받지 말고 원하는 학생은 다 받아달라는 학부별 정원타과 의견도 20%에 달하여, 학생 모집 및 선발방법에 관한 한 교수들과 학생들 간에는 상당한 의견차이가 존재하였다.

2. 농학계 대학 통폐합에 대한 몇 가지 제언

• 전공은 대학원에 두고 학부는 철저히 변화하라

앞에서 언급한 고려대 생명산업과학부의 지원자 부족 예와 같이 어설픈 변화보다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한 지방대학에서 기존의 식량자원학과를 허브자원식물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교과과정을 개발한 것은 21세기의 well-being 추세를 겨냥한 참신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 단과대학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이수과목에 따른 개별전공 부여를 고려하라

고려대 학생들의 54%는 현재와 같은 1+3 제도가 아니라 단과대학에서는 여러 전공과목들을 개설하고 가이드라인만 제공한 후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한 결과에 따라 전공이나 부전공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일 선호하였다. 예를 들어, 생명유전공학분야에도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식물에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하면 식물유전공학사 학위를 주는 것이 가능해야만 대학원에서 적합한 전공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학부의 특성이 아직도 강한 곳에서는 처음부터 학부별 모집을 고수하고 가능한 많은 수시지원생을 학부 단위로 뽑아야 한다

고려대 교수들의 63%는 입학 때부터의 학부별 모집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1+3 제도 하에서 학생들의 2학년 진입시 문제가 되고 있는 학부별 학생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학생들의 진로를 우선으로 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학 통폐합의 주체는 대학본부와 교수들이었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의 취업과 국내외 대학원 진학과 같은 수요자 중심 이슈가 통폐합 과정에서 부각되어야 한다. 또한, 통폐합을 통해 대부분의 대학은 생명산업으로의 특성화를 기하고 있으나 국내 생명산업의 발전도를 고려해 볼 때 자칫 과잉 인력배출이 우려되며, 따라서 대학이나 지역의 여건이 고려된 차별화된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국립대학만 농과대학으로 남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농업의 비중과 농업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 국립대학은 농업·농학 분야를 견지하고, 사립대학은 자생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상호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지방 국립 농과대학이 도별로 3~4개가 있는 곳은 통폐합하여 단일대학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 2 주제 : 한국 농업 발전과 농업 부문 지역혁신체계(RIS) 대응을 위한 농과대학의 Extension 기능에 관하여

발표자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 김 내 수 학장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학의 설립

목적과도 같이 농과대학은 농업이라는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농업의 발전을 주도할 인재의 교육과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그 연구 결과를 농업 현장으로 이전하는 봉사의 세 틀(tripartite)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학 및 농업에 관한 관심은 쇠락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의 변화 속에서 교육과 연구와는 달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농과대학의 extension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농과대학의 Extension 기능

우리나라 농과대학들이 과거에 extension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여 왔는가라는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해방 이후 미 군정시대에 농과대학과 농촌지도기관의 일원화에 의해 지도업무를 잠시 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도업무는 농림부 소속의 독립된 기관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수행되어 왔다(표 2 참조). 즉, extension 기능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농과대학은 주변적 존재로서 남아 있었으

표 2 우리나라 농촌 지도사업 체계의 변화

<p>농사개발원('47. 12 ~ '48.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식 대학 외연교육형(농과대학 + 시험장 + 교도국의 일원체제) - 인력, 예산 등 여건 불비로 지도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농과대학은 문교부로 이관
<p>농업기술원('49. 1 ~ '56. 2)</p>
<p>중앙농업기술원('56. 3 ~ '57.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재건을 위한 교도사업을 강화하고자 중앙농업기술원 설치 - 강력한 농정추진을 위해 교도기구를 행정체계에 통합
<p>농사원('57. 6 ~ '62.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y 보고서를 기초로 농사교도법 제정 - 중앙농업기술원을 농사원으로 개편, 지도기구를 행정과 분리해 국가체제로 일원화
<p>농촌진흥청('62. 4 ~ 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설치 - 지방 지도기관을 자치단체 소속의 외청 기관화하는 행정기구 개편

며, 그래도 현재 농과대학에서 제도적으로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extension 업무는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농업 119사업, 농과대학 특성화사업과 금년 새로이 시작된 겸임연구원 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2. 농과대학은 왜 extension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농과대학이 extension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연구·지도는 서로 별개가 아니며 이들이 함께 기능하게 될 때, 보다 더 큰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농산물의 효율적 생산만을 강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미래의 농업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농업 생산체계에 지워진 생태학적 책무를 수행하며, 국제화된 시장에서 생존하고, 생명공학적인 기술을 응용하면서 점차 규모면에서 대단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들을 접목시키지 않고서는 현재의 농업이 계속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까지 extension 업무에서 떨어져 있던 농과대학을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습교육과 기술지도를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이들이 농업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농과대학의 교수와 학생들 역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그러나 농과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여 농업의 생존과 상관없이 농학계 대학이 농업을 버린다면 단기간 그 대학 교수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무너진다면 그들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농학계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농업이라는 산업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대학이 extension에 좀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3. Extension - 어떻게 할 것인가?

농과대학의 extension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문제와 그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제도적인 문제는 지도사업 담당 주체 간 관계 설정의 문제로서, 기존에 농촌지도 업무를 담당하던

각 도의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유관 기관들과 대학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농촌지도 업무에 관한 문제는 행정기관들 간에도 조정될 부분이 있다. 현재 일부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업행정 조직과 통합되거나 축산, 생활개선 등 일부 지도업무가 시·군청으로 이관되어 있어 농정 시책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자금지원 권한은 농정기관에서 행사하고, 지도기관은 권한 없는 기술지도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를 과도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 제도적인 문제는 extension을 수행하는 교수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제도적 보장과 관련한 문제이다. 교육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한 대학교수들의 교수 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 주당 9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교수 1시간을 위해서는 강의 준비, 실제 강의, 과제물 평가 등 총 4시간이 소요되는 바 실제로는 거의 모든 근무시간을 교육에 할애하라는 지침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겸임 연구원 제도 하의 농촌지도는 실제로는 주말을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앞에 적시한 두 가지 제도적 문제 외에 대학이 extension 업무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좀더 근원적인 문제로서 각종 교육(농업인 후계자·중견농업인·고급 농업연구인력 양성교육, 농업인 보수교육,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홍보교육, 농산물 소비자 교육)의 수행 주체, 연구 성격(기초·첨단·현장문제 해결)에 따른 역할 조정, 연구비 배분 및 연구결과 평가에 관한 업무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능들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과대학 extension 대상의 문제는 국가적 우선순위와 농업경영 당사자 및 농업상품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체계 (RIS)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농업특성에 맞는 extension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 extension 담당 기관들 간의 관계가 경쟁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술집약적인 선도 농업인 또는 대학교육을 받은 농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기술을 이전하고, 이들로 부터 전체 농가로 새로운 경영 마인드와 신기술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주제 : 농업을 보는 사회 인식의 오류

발표자: 언론개혁시민연대/김영호 공동대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안타깝게도 농업이 지닌 소중한 가치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1080년대 후반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농업시장의 개방이 거론될 당시에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농업은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개방되고 값싼 외국 농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오자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농업기반의 붕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위협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언론에서 찾고 싶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농업이 없습니다. 지난해 7, 8월에는 비가 정말 지겹게 왔습니다. 햇볕이 안 들자 냉해가 심했습니다. 9월 들어서도 비가 멎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 판에 추석이 가까워지자 채소류 값이 뛰는 기사가 간간히 나왔습니다. 이것은 채소류 작황이 나빠 농민의 피해가 크다는 농업기사가 아닙니다. 채소류 가격이 오른다는 물가기사입니다. 지난해에는 계속된 여름 비 뿐만이 아니라 태풍마저 몰아쳐 들판을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그 때 큰 흉년이 들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농가피해를 수해기사의 한 토막으로만 다루는데 그쳤습니다. 큰 공장이 수해를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피해규모가 얼마이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노사가 합심해서 복구작업을 한다느니 하며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결국 작년 쌀 수확량은 23년만에 최저치인 3,091만석에 그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그 발표를 신문은 2~3단으로 보도했고 방송도 아주 작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재고미가 많아 쌀 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잘못된 해설까지 곁들였습니다. 이것은 360만 농민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일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 의미를 간파하지도 못한 채 묵살해 버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농촌에 멀리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농민운동에 일생을 바쳐 온 이경해 선생이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화에 항거하여 자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세계화라는 패권주의를 선도하는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고인의 고향을 찾아 그의 삶

과 죽음을 통해 한국 농촌의 절망적인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도 '눈물의 들판'이라는 르포 기사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한국 농촌의 비참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이경해 선생의 자결을 사건기사로만 간단하게 취급했습니다. 그가 왜, 무엇을 죽음으로 외치려 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농민의 집단시위와 시장개방을 빼놓고는 일년 내내 농업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적자영농과 농정실패를 목청껏 호소해 봤자 위정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마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과격하게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서 피라도 흘려야 언론은 그제서야 사건기사로 다룹니다. 언론의 무관심이 농민의 급진화를 불렀고 그것이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을 전후하여 세 차례나 국회비준이 무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자세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국회 안에서는 농촌지역 의원들이, 국회 밖에서는 농민들이 상경투쟁을 벌여 비준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표에 눈먼 '농촌당' 의원들", "세계시장에서 한국 왕따 자초" 따위로 농촌지역 의원들에게 국익을 저버렸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항거하는 농민들을 국익을 모르는 과격한 집단으로 묘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협소한 시장에 수출해서 얻는 이득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피해를 조목조목 따져 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농업을 경시하는 세태는 정치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농업전문가의 국회진출이 아주 미미합니다. 제 17대 국회의 경우, 지역구에서는 전임 농림부 장관이 무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되었습니다. 비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고작 1명만 당선권에 들었고 민주노동당에서 2명이 진출했을 뿐이며 한나라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구비례로 따지면 농업관련자가 최소한 20명은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데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니 농민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 농림부의 위상은 취약합니다. 비교우위론자들이 포진한 힘센 부처에 눌러 말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진출한 농업전문가들이 극소수이니 농업, 농민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쌀 추가개방이 또 다시 농촌경제에 태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는 미풍도 감지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언론은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주 수입원인 벼를 재배하지 못하면 우리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농사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농업을 포기하면 농촌이 붕괴되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 영향은 막중할 것입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에 타결될 쯤에만 해도 한국 언론은 농업기사를 연일 무게있게 다루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자세를 질타하는가 하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문은 지면이 3~5배나 늘어났고 방송은 공익성,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떠들었습니다만 농업기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도자세도 판이하게 달라져 개방농정에 편승하여 오히려 농업을 공격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벌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눈여겨보면 아시겠지만 언론은 이제 재벌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재벌이란 단어가 지닌 부정적 의미를 지우기 위해 대기업 또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MF 관리체제는 국가경제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IMF 사태는 재벌들의 부실경영으로 금융부채가 부실화되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일어난 사태였습니다. 그 때 언론은 재벌의 부실경영도, 은행의 부실경영도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니다. 공적자금을 무려 164조원이나 투입했지만 많은 은행, 많은 기업, 많은 건물이 외국자본에 넘어갔습니니다. 공적자금의 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언론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구조 조정이나 농가부채 문제만 나오면 언론은 흥분합니다. 지난 10년간 67조원을 퍼부었는데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그 모양이 되었는지 심층취재를 통해 정책실패나 관리부재 문제는 파헤치지 않고 그냥 비난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투자와 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돈이 농민의 손에서 없어진 듯이 말하는데 있습니다. 390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는 많습니다.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등의 단체들은 연구기능을 갖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성을 위해 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자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을 우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경제단체를 전담하는 기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이 과거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언론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체수입에서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9%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신문은 광고수입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에서 농업기사를 좀처럼 쓰지 않으니 기자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심층취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기사도 거의 발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농업이 처한 현실을 공론화하지 않으니 국민의 관심은 멀어지고 정치인이나 관료조직도 대응정책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쌀을 지키고 농업을 살리려면 국민적 호응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언론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농업이 처한 현실을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업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농업학자, 연구기관 등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연대단체를 결성하여 국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여 국민이 갖고 있는 농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정부를 상대로 압력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왜 쌀을 지켜야 하는지 언론사에 기사를 부탁하고 학자들은 언론사에 기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증대를 위해 자라는 세대를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 순회강연도 갖습니다.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수입 농산물의 위해성도 널리 알립니다.

농업이 지닌 환경보존기능이 얼마나 고마운지 대책자도 발행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너무 희박합니다. 통일에 대비해서도 농업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면 농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개방되어도 국민이 수입농산물을 사서 먹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이 이대로 가면 누가 농학을 공부하고 누가 이 나라의 농업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스위스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EU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을 사서 먹습니다. 스위스를 배웁시다.

제 4 주제 : 농업, 이젠 시스템 경쟁이다

발표자 :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농업정책연구소 / 이 현 목 소장

1. 진짜 개방은 이제부터다

작년에 농민단체들은 한·칠레 FTA 협정의 국회비준을 둘러싸고 5차에 걸쳐 격렬한 대모를 했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농민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개방의 파고에 비하면 한·칠레 FTA는 약과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올해 5월 6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으로 쌀의 관세화 유예에 관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관세화 유예든 관세화든 “예외 없는 개방” 논리에 의해 쌀 시장은 지금보다 대폭 개방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협상상대국 속에는 자국의 이익이면 논리도 인정도 없이 밀어붙이는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끼어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어쩌면 DDA 협상은 쌀 협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 농산물수출국들은 UR 협상이 시장개방과 교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실패했다며, 보조금과 관세를 대폭 감축하고, 관세상한제를 실시하자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혹시라도 관세상한제가 도입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300~500%에 이르는 중요 농산물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쌀 협상과 DDA 협상이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할 요소는 중국이라는 변수이다. 쌀은 물론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농가소득에서 비중이 큰 품목들은 하나같이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현재 농촌·농민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2013년까지 농수축산물 수출액을 지금의 두 배인 420억 달러로 증가시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자국에 대한 공산품수출로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의 농산물시장을 확대, 개방시키겠다는 생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은 외국의 시장개방 요구뿐만이 아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움직임도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수입농산물은 이미 규격화·상품화되어 있고 대량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사업’인 것이다.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개방은 지난 10년 동안의 개방보다는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짜 개방은 이제부터다!

2.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1994년 UR 협상이 타결된 직후, 문민정부는 우리 농업을 현대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몇 십억 짜리 첨단 유리온실을 짓고, 자동화된 선별포장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을 짓고, 농기계를 대형화·현대화하고, 경지정리를 규모화하고, 도매시장을 짓고, 축사를 자동화했다. 그러나 투자로 인한 생산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모든 품목에서 수요량의 3% 이상이 풍흉에 관계없이 수입되고, 너도나도 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을 늘리고 보니 가격이 매년 떨어지게 된 것이다. 시설현대화에 따라온 융자금을 갚아나가야 할 시점에서는 IMF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게 되었다. 농산물 가격은 더 떨어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농촌은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IMF 금융위기 직후에 들어선 국민의 정부는 가격 지지정책을 펴면서 농가부담 경감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유통개선에 있다며, 유통관련 투융자 예산을 농업투융자 전체예산의 30% 선까지 확대하였다. 또, 유통개선의 핵심은 직거래에 있다며 전국 대도시의 공터에 직거래장터가 설치되고, 농협직원들이 농산물을 신고와 소비자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팔았다. 농림부는 “직거래에 참여한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10~20% 증가한 반면, 소비자 구입가격은 오히려 20~30% 하락하여 약 2년 동안에 유통비용을 1조원 수준 절감하였다”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협직원과 공무원들의 시간손실과 출장비, 차량운영비, 그리고 팔다 남은 농산물의 금전적 가치 등은 유통개선 효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렇게 ‘획기적인’ 방식이 왜 계속되지 않는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추진된 일은 농협과 축협의 통합이었을 것이다. 근 1년 동안 농림부와 축협중앙회는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였다. 통합 이후 농림부는 “이제 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게 되었

다”고 하였다. 5년이 지난 지금 일선의 농민들은 자기 조합을 해산하기도 하고, 중앙회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드높아지고 있다.

3.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UR 협상이 타결되고 벌써 10년이 지났다. 1년에 8조원 가까운 돈도 “쏟아 부었다”. 한층 심각한 개방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우리 농업의 체질은 10년 전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고, 농민들의 생활도 나아진 게 없다. 인건비, 토지용역비 등 중요 생산비가 우리의 1/10 밖에 안 되는 중국에 대해서는 가격에서 자신이 없고, 영농규모에서나 생산비 면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점이 없는 일본에 대해서는 품질에서 자신이 없다. 영농규모에서, 영농기술에서 훨씬 앞서는 농업수출국에 대해서는 품질에서도, 가격에서도 자신이 없는 것이 우리 농업이다. 수매가도 올리고, 직접지불제도 시행하고, 부담경감조치도 했지만 농민들의 생활이 나아진 것도 없다. 1995년 2,180 만원이던 농가소득은 2003년 2,654 만원으로 8년 동안에 겨우 474 만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293 만원에서 3,528 만원으로 늘어,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5%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반면에 농가부채는 916 만원에서 2,697 만원으로 194% 증가하였다.

4. 참여정부의 <새농정대책>은 어떤가?

참여정부는 지난 2월 23일 선택과 집중으로 규모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고, 정책의 대상을 농업중심에서 농촌과 식품산업으로 확대하고, 직접지불 등 소득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정 road map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농업중심에서 식품과 농촌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안정 및 농촌 복지대책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9대 혁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전업농을 키우겠습니다. 영농규모화사업과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본격

추진하여,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35세 미만의 젊고 유능한 창업농을 매년 1천명씩 선발하여 집중 육성하고 농업인이 전문 경영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경영컨설팅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직접지불 예산을 2013년까지 23%로 늘리고 친환경축산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30여개 품목으로 늘리고 국가재보협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겠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도입하고,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토환경도 보전하겠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를 감축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며,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신기술 과학 영농으로 농업도 성장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겠습니다. 동충하초와 같은 기능성 상품 성공사례가 확산되도록 필요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강화하겠습니다. 무균 복제돼지를 이용한 인간장기 생산 등 에너지, 의료 분야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산물 품질 고급화로 수출 50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수출전문 생산단지를 정예화하고 물류센터 활용해서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 시장에서 수출을 늘려가겠습니다.

여덟째, 농촌 복지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을 연간 25만 7천원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고 건강보험료 경감율도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농가 자녀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출신 대학생의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 지원합니다.

아홉째,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이 정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총 194개 읍을 농촌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하고 주변 마을 3~5개를 묶어 1천개 권역을 종합 개발하겠습니다. 농촌 관광마을 1,000개소를 조성하고 1사1촌 운동과 청소년 체

협학습 등을 통해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를 농가소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정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농업인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타당성을 엄격히 평가한 후 지원하여 농가의 부채유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역의 산·학·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 <새농정대책>은 성공할 것인가?

필자는 정부의 새로운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내용이나 추진시스템이 과거 10년 동안 추진해 온 것들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장에 있는 농민과 농업분야 전문가들의 진정한 참여와 분발 없이는 ‘완벽한’ 새 농정대책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문화일보와 전문지 등에의 기고를 통해 강조했다.

『작년 11월 19일 농민대회 직전에 발표한 119조원 투융자계획(안)은 농민단체,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뜯어봐도 쉽게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완벽한’ 9개 분야 180개 과제, 117쪽에 이르는 광범위하고도 상세한 대책이다. 문제는 10년 전 문민정부나 5년 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때에 만들어졌던 농업·농촌 종합대책들도 ‘논리적으로 완벽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10년의 세월과 “쏟아 부은” 돈에도 불구하고 농업문제, 농촌문제, 농민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필자가 ‘완벽한’ 새 농정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첫째 이유는, 정책이 실현되는 마지막 단계인 현장의 구조가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총론과 지침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집행현장의 사람과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과가 별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많은 정책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양한 현장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엄정하게’ 집행해 줄 사람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새 농정비전”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둘째 이유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을 따라잡기는커녕 중국에 따라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우리 농업이 아무리 비용을 절감해도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거기다 중국은 까다로운 선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수출을 하겠다며 관민이 일체가 되어 있다. 중국농산물이 품질까지 선진국과 비슷해진다면 우리 농업은 세계최고의 품질과 유통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6. 농업, 이젠 시스템경쟁이다!

그 동안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가장 결정적인 결함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농산물은 단순히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라 한 나라의 농업생산·유통은 물론 연구개발 등 총체적인 농업시스템의 결과물(‘Agricultural System Product’)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아직도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영농의 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품질개선 등 주로 농가수준에서 찾고 있다. 우리 농업을 아무리 규모화해도 중규모인 유럽농가의 1/10 밖에 안 되며, 아무리 비용을 절감해도 임차료와 인건비가 우리의 1/10인 중국의 몇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

개방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농가는 물론 관련 농자재산업, 가공산업, 유통산업의 종사자, 관련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 모두가 한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국내 양돈업이 위축된다면 도축업자의 할 일도 줄어들 것이며, 사료업자, 수의사, 동물약품업자, 가축 운송업자, 양돈시설업자도 일이 줄어들 것이다. 축산학을 공부하겠다는 학생과 농민이 줄면 당연히 축산관련 대학과 학과도 줄어들어 대학교수 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분명 모두가 한배를 타고 있다. 각자의 발목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7. 농과대학, 우리 농업시스템의 Software를 책임져야

생산여건이 불리한 우리는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유통시키고, 가장 좋은 값에 팔 수 있는 시스템의 효율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파고에 맞설 수밖에 없다. 시스템의 효율성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Sub-system 과 그 구성요소들이 최

종목표를 향해 얼마나 노력하고 협동하는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우리 농업계 전체가 얼마나 위기를 공감하고, 유기체적인 협동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농과대학은 농업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시스템의 핵심인 Software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Hardware 측면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나라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고도로 정교한 Software와 그 효율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종자와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농장과 각 Sub-system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역할, 시스템 참여자들을 교육시

키는 역할 등 우리 농업의 미래는 농과대학이 어느 정도나 자기 역할을 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농업계는 우리 농업을 세계최고의 농업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세계최고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불가능은 없다. 지금처럼 농민, 전문가, 조합, 관련사업자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진정한 경제협동체를 만들고, 전문가들과 긴밀한 산학협동을 하면서 세계 최고 농업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라야 비농업계도 기꺼운 마음으로 농업계를 도울 것이다.